

인류가 사수해야할 목표 섭씨 1.5도

기후환경이야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산업혁명 이전 대비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한다.’

섭씨 1.5도. 인류의 거대한 약속이자 목표이다. 지난 2015년, 세계 모든 나라는 파리기후총회, COP21에서 합의했다. 파리기후협정이 탄생한 것.

협정에는 ‘세기말까지 2도보다 훨씬 아래를 유지하되, 1.5도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도를 넘어서면 지구생태계와 인류가 극히 위험하다는 지구촌 과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를 국가들이 수용한 것이다.

그로부터 이제 9년.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1.2도 상승했고 상승추세이다.

이대로 가면 2030년대 전후 1.5도를 넘어 2050년 되면 2.5~3도에 육박할 것이라는 과학자들 우려 섞인 전망이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해를 경험하면서 걱정과 우려는 더 크다. 유럽연합 기상기후기관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기구(C3S)’의 의하면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의 1.5도에 육박했다.

비상한 국면이라 아니할 수 없다. 최근에 국내를 비롯해 세계 각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후기상 재난이 1.5도 넘

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고 보여주고 있다. 1.5도를 넘어서 2도에 혹은 2.5도에 이르며 현재의 고통은 2배 혹은 4배 이상으로 증폭될 것이 명확하다.

원인을 제공하는 온실가스 배출이 줄지 않고 있다. 작년 말 온실가스 배출이 사상 최고였다. 금년도 내년도 배출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힐 방도가 없다.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했던 섭씨 1.5도 사수가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 1.5도를 지키기 위한 합당한 지구적 기후행동이 미흡한 결과다. 그러나 최근 세계에너지기구(IEA)에 의하면 금년 혹은 내년 온실가스 배출 정점(Peak)을 찍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1·2위 국가인 중국과 미국에서 석탄발전이 줄고 있고 영국이나 유럽연합 석탄퇴출 속도가 빠르다. 이들 나라를 포함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급진장하고 있다. 긍정적인 조짐이다. 인류에게 실로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서둘러 배출 정점에서 가파르게 하강 곡선을 그려야 한다.

세계는 ‘2030 40~50%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다. 1.5도를 사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1.5도 목표에 합당한 기후행동은 대단히 미흡하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선진국, G20이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은 2030년 전후 석탄퇴출, 2030년대 석유와 2040년대 가스 퇴출’, ‘개도국들은 2040년 전후 석탄퇴출, 2050년까지 석유 가스 퇴출’을 약속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야심찬 목표이자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유엔 기후총회, COP28에서 ‘2050년까지 화석연료 퇴출’여부가 뜨거운 쟁점이었고 결국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라는 언어로 합의 채택됐다. 물론 전환의 시간표와 구체적 내용은 과제로 남겼다.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 선진국들은 1.5도 약속에 합당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 석탄 석유 가스 등 퇴출 혹은 전환과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 시간표가 있어야 한다. 1.5도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줄기찬 노력이 필요하다.

기후행동에 있어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느림보’이다. ‘2030 40%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의 목표이나, 2030 감축 목표도 미흡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대단히 미흡하다. 영국에 있는 민간연구기관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2030 감축목표가 1.5도 목표에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며 60%가 합당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세계 모든 국가들은 파리협정의 규정에 의해 새로운 감축목표와 기후행동계획을 가져야 한다. 목표연도는 2035년이고 내년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도 세계 모든 나라도 1.5도 목표에 합당한 감축목표와 기후행동계획으로 업그레이드 할 기회이다.

일시적으로 1.5도에 육박했다고 1.5도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다. 광주 전남과 한반도, 세계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다. 대폭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부흥이 대세를 만들어가야 한다. 1.5도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할 때이다.

社說

군공항 이전 지역 국회의원 적극 나서라

정치권 소극적 대응 무책임해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 논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핵심 의제인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가 표류하고 있고 지금은 광주와 전남 사이에 대화마져 끊긴 현실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에 누구보다도 무책임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광주·전남의 국회의원들”이라며 “서로 마주 보는 일조차 외면하며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민의를 심각하게 거스르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에게도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전남도는 광주 시장의 (함흥차사) 발언을 문제삼아 사과가 없다면 대화도 없다고 엄포를 놓고있다”며 “정말 이것이 걸림돌이라면 광주시장은 깔끔하게 사과를 해야 하고, 전남도 역시 더 적극적으로 문

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역 숙원사업인 광주 군·민간공항 통합 논의는 흐지부지 돼서는 안된다.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광주·전남 전체 국회의원 18명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에도 당 차원의 적극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공항 이전을 둘러싼 문제 앞에 호남 정치도, 유능한 민주당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지역의 반응이다. 소음 등으로 군공항을 받는다는 것은 마냥 환영할 만한 시설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전지역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은 무안공항을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키워 호남 발전을 견인할 중차대한 일이다. 비워진 광주공항 터를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이끌 혁신 거점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절실하다.

이를 해결할 해법제시는 바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하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머리를 맞댈 일이다. 더 이상 지역 국회의원들은 뒷짐만 지고 방관해서는 안된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시·도 역시 대화와 공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광주 설립 꼭 필요한 국회도서관 광주관

광주시의회 7일 유치 토론회

광주시의회와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를 위한 토론회가 7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렸다. 국회도서관은 소장 도서·자료가 8400만 권, 정기간행물도 2만 7000여 권에 이르는 대표적인 국가도서관이다. 정보가 곧 힘이 되는 지식정보화 시대,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창고가 광주에 설립돼 광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대한다.

이날 제기된 광주관의 기본방향은 광주만의 특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압축된다. 민주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3·1운동부터 광주학생독립운동까지 이어진 독립운동을 바탕으로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의 상징성 등을 연계한 민주·인권·평화의 연구도서관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지식정보의 효율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전시관과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융합하는 모델도 제시됐다.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서비스 취약계층 등의 지식정보 접근의 장애를 제거하는 배리어프리도 바람

직한 제안이다.

국회도서관은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인류의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해 후세에 전승한다는 의미도 크다. 특히 국회도서관의 광주관 설립은 기존의 규제완화나 개발사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지식거점 형성을 통해 복지부터 교육과 문화까지 지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이다. 광주관이 서울본관과 부산관에 이어 오는 2030년 개관 예정인 세종관과 함께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알 권리’와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시킨다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결국 인재에서 나온다. 정부와 국회, 광주시는 데이터의 허브이면서 평생학습을 위한 지역 밀착에 기여하는 해외의 사례를 거울 삼아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민의 관심도 필요하다. 지식정보화시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 지역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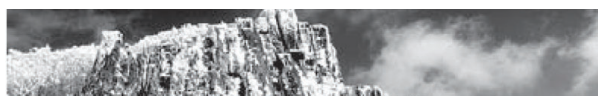
6일(현지시각) 이스라엘 라마트 간에서 주민들이 이스라엘-가자 전쟁 1주년을 맞아 '10월 7일'이라고 불 밝힌 다리를 건너고 있다. AP/뉴스시

서석대

‘5수’ 끝에 일본 총리자리에 오른 이시바 시게루의 과거 발언 등이 조명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높아지는 분위기다. 닷토리현지사, 참의원을 지낸 부친이 사망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이시바는 전형적인 세습 정치인이지만, 지역구에서의 지지도가 상당했는지 28세,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중의원에 당선된 후 닷토리현에서만 내리 12선을 했다. 반면, 당내에선 늘 인기가 없던 그의 좌우명은 ‘시조후군(鸞鳥不群)’. ‘독수리나 매 같은 강한 새는 무리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다.

1993년 정치 개혁을 주장하며 자민당을 탈당했다가 1997년 재입당한 그는 당내 주류를 향한 쓴소리도 서슴치 않았으며 좌우명과 같은 비주류의 길을 성큼성큼 걸어왔다. 특히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정적으로 꼽히는데, 번번이 아베와의 경쟁에서 고배를 마시다가 마지막 막으로 여겼던 이번 선거에서 드디어 총리직을 거머쥔 것이다.

그의 취임이 한국에서 비교적 환영 받는 이유는 그동안 이시바가 던진 메시지들 때문이다. 이시바는 지난 2019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패전 후 전쟁



책임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은 것이 많은 문제의 근저에 있다”며 “그것이 오늘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면화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어 태평양 전쟁을 ‘일본의 침략 전쟁’이라고 지적하거나,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이 납득할 때까지 일본이 사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발언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을 분사하기 전까지는 참배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과거사 문제에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는 평가다.

다만 국회의원 시절 그의 친한적 발언만으로 한일 과거사에 대한 사죄가 이뤄지거나 관계에 엄청난 발전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선부르다는 지적이다. 방위력 강화 기조나 독도 문제에 대해선 일본 영토라고 주장해 오는 등 여전히 마찰을 빚을 소지도 충분하다. 이시바에 대한 과한 호감으로 오히려 ‘新 친일’을 표방하며 그릇된 역사관에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득세하는 기회가 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가 입으로 뱉었던 올바른 역사 인식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 실행에 옮겨질지는 지금부터 더 날카롭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에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정관(正觀)이다.

곽지혜 취재1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